

OECD 사무국 소개

경제국(Economics Department)

백 용 천

OECD 경제국 서기관
Yongchun.BAEK@oecd.org

1. 경제국의 조직과 기능

가. 경제국의 위상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정부간 협력기구인 OECD는 사무국 조직을 통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국은 OECD사무국의 12개 집행국(executive directorate) 중 하나로서 OECD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고도 어렵다. 한마디로 OECD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OECD 웹사이트의 경제국 소개 부분(<http://www.oecd.org/eco>)을 보면 첫머리에 “경제국의 역할은 거시경제 및 경제구조와 관련된 이슈, 특히 양자간의 상호관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경제국에서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바꾸

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경제국에서는 외교, 국방과 같은 이슈를 제외한 제반 경제이슈를 모두 취급한다. 거시경제문제가 경제국에서 전담하는 사항이지만, 각종 경제구조 관련 이슈는 OEC내 여타 부서와 기능 중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국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특정이슈를 분석하는 데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비교한다면 경제국은 재정경제부로, OEC내 여타 부서는 다양한 경제부처로 보면 된다.

나. 의사결정기구

경제국 조직은 OECD 여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Committee)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분된다. <표 1>에서 보듯이 경제국에는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와 경제발전검토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and Review Committee: EDRC) 두 개의 위원회가 있다.

EPC가 회원국의 공통적 관심사항(예: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다루는 반면, EDRC는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horizontal/cross-country 방식과 vertical/country-specific 방식)은 종종 상호 보완적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특정이슈가 EPC에서 먼저 국가간 비교검토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일반적인 정책방향 또는 잠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러한 잠정 결론은 EDRC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사항을 감안하여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증받게 되고, 그 결과는 다시 EPC로 취합되어 국가간 비교검토 차원에서 재논의되는 것이다. EPC에는 세 개의 작업반이 구성되어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반면, EDRC에는 하부조직이 없다.

다. 사무국

경제국의 사무국 조직은 국가간 경제구조 및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이슈를 다루는 정책분석국(Policy Studies Branch: PSB)과 개별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과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국가분석국(Country Studies Branch: CSB)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EPC와 EDRC를 담당한다. 경제국은 명칭을 여타 국(局)의 “directorate”와는 달리 “depart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국은 사실상 “국”보다 상위 개념인 “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PSB와 CSB 각각을 “국”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국장급 직원만도 5명(총괄국장 1, 국장 2, 부국장 2)이며, 전체 직원 수도 2004년 9월 현재 146명(비정규직 포함시 162명)으로서 여타국의 1.5~3배 수준인데, 경제국의 인력규모는 OECD 전체 1,997명의 7.3%나 차지한다.¹⁾

〈표 1〉 OECD 경제국의 의사결정기구

위원회 및 작업반	기능 및 역할
경제정책위원회 (Economic Policy Committee: EPC)	회원국 공통의 거시경제 또는 경제구조 이슈 검토, 회원국 경제부처 또는 중앙은행의 고위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 1년에 2회 개최
1. 단기경제전망작업반 (Working Group on Short-Term Economic Prospects: STEP)	사무국에서 마련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검토, 1년에 2회 개최
2. 구조개선작업반 (Working Party 1: WP1)	회원국들의 성장, 물가, 고용 등과 관련된 이슈를 중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권고, 1년에 2회 개최
3. 국제수지균형작업반 (Working Party 3: WP3)	국제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취급,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 통화정책 측면에서 접근, 1년에 4회 개최
경제발전검토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ew Committee: EDRC)	개별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정책권고, 검토주기는 회원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평균 20개월 수준 비회원국이지만 경제규모가 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도 취급

PSB는 담당하고 있는 과제에 따라 분류되며, 현재 5개 과가 있다. 먼저 통화금융과는 금융시장 관련 이슈 분석 및 EPC 소속 작업반 중의 하나인 국제수지균형작업반(Working Party 3: WP3)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구조정책분석 1, 2과는 다양한 구조개선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연구결과는 대개 구조개선작업반(Working Party1: WP1)에 상정된다. 다만 EDRC와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순수한(pure) WP1팀과 합동(joint) WP1/EDRC팀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OECD경제검토보고서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거시경제분석 및 시스템관리과는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평가와 관련된 각종 실증(empirical)분석작업을 수행한다. 끝으로 종합경제평가과는 CSB와 협력하여 경제전망작업을 총괄함으로써 단기경제전망작업반(Working Group on Short-Term Economic Prospects: STEP)을 지원한다.

- 통화금융과(Money & Finance Division): 각국의 통화, 금융, 환율정책 분석.
- 구조정책분석 1과 (Structural Policy Analysis Division 1): 이민정책, 경쟁정책, 고령화/연금, 지방재정 (fiscal federalism), 상품시장 (product market)에서의 규제 등.
- 구조정책분석 2과 (Structural Policy

Analysis Division 2): 지속가능발전, 국가간 주요 경제구조 비교분석(Stocktaking), 고용정책, 무역정책 등.

- 거시경제분석 및 시스템관리과 (Macroeconomic Analysis & Systems Management Division): 계량데이터 (Analytical Data Base: ADB) 관리,²⁾ 계량경제분석.
- 종합경제평가과 (General Economic Assessment Division): OECD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총괄, 재정정책.

한편 CSB는 담당국가에 따라 분류되며 현재 6개 과가 있다. 1개 과는 팀에 해당하는 데스크 (desk) 3개로 구성되며, 직원 2~3명으로 구성되는 각 데스크에서 통상 2개 국가를 전담하므로 1개 과에서 6개 국가를 담당하게 된다. CSB는 EDRC에 상정되는 회원국 경제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작성과 연 2회 OECD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작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경제규모가 큰 중국, 러시아, 브라질, 칠레 등에 대해서도 비회원국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 국가분석 1과 (Country Studies Division 1): 미국/아이슬란드, 캐나다/뉴질랜드, 스웨덴/덴마크
- 국가분석 2과: 이탈리아/노르웨이, 멕시코

1) C(2003)56, C(2004)48, OECD Human Resource Management "Staff Profile Statistics"

2) OECD 각 부서는 대개 담당 분야와 관련된 자체 D/B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ADB는 경제국이 관리하는 거시경제 관련 D/B의 명칭이다.

- 코/포르투갈, 호주/그리스
- 국가분석 3과: 한국/일본, 프랑스/폴란드, 터키/슬로바키아
- 국가분석 4과: EU/아일랜드, 영국/핀란드, 스위스/스페인
- 국가분석 5과: 독일/오스트리아,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체코/헝가리
- 비회원국과(Non-member Economies Division): 브라질/칠레/남미, 러시아/NIS(New Independent States), 중국/아시아

2. 경제국의 주요한 출판물과 작업과정

경제국에서 작업한 연구결과는 앞서 설명한 위원회 또는 작업반의 검토(multilateral surveillance) 과정을 거쳐 대부분 출판물로 간행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OECD경제전망(Economic Outlook), 회원국 경제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OECD 경제연구(Economic Studies) 등 세 가지가 있다.

가.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세계경제 전반의 동향과 평가, 개별 회원국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회원국이지만 비중이 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을 두어 다루고 있다. 이와 아울러 EPC에서 논의된 구조개선 관련 논의결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

다. 발간주기는 여타 주요 경제기관과 마찬가지로 연 2회이며,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4년 6월에 발간된 EO75(75번째 경제전망이란 의미)이다. 경제전망은 작업반 및 위원회(STEP과 EPC)에서 회원국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사무국이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고, 따라서 회원국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전망작업에는 INTERLINK(International Linkage Model) 또는 F/E(Forecast Entry)라는 자체 계량모형이 사용된다.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대부분 동일하며(우리나라는 267개, 일본은 312개), 다수 블록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블록으로는 지출 측면의 GDP, 가계부문, 정부지출, 정부수입, 통화부문, 물가, 노동시장, 잠재GDP, 기업부문, 대외무역, 원료부문 등이 있다. 전망작업은 PSB와 CSB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PSB에서 ADB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최근치로 업데이트하면서 유가, 금리 등에 대한 전제치를 제시하면, CSB의 각 데스크에서는 국가별로 주요 변수에 대한 잠정적인 전망치를 제출하게 된다. 국가별 전망이 세계전망으로 통합되는 과정은 주로 대외무역부문에서 이루어진다. 국가별 동향 및 전망치는 교역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PSB의 별도 팀에서는 각 데스크가 1차로 제출한 전망치를 토대로 수출입 시장규모, 수출입 물량, 수출입 단가, 교역조건 등 국가별 대외무역 관련 변수를 전망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각 데스크로 전달되어 국내 및 해외부문을

망라한 경제전망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PSB의 여타 분야별 전담 팀(예: 재정, 통화)에서도 국가별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시행착오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나. OECD경제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EDRC에서 다루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경제검토보고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라 할 만하다. 보고서의 특징 중 하나는 여타 보고서와는 달리 작성과정에서는 검토대상국에도 비밀로 부쳐지며, 위원회 개최 4주 전에 전 회원국에 동시에 공개(일반 인에게는 회의 이후 1달 정도 뒤까지 비공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토대상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EDRC회의 당시 또는 회의 이후 검토대상국과 사무국간에 주어지는 최종(wrap-up) 미팅에서 사후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EDRC회의석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사후에 수정할 수 없다. 경제검토보고서는 EDRC 책임하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공개는 회원국 만장일치의 찬성을 요구한다.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 등으로 인해 통상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나 이해관계가 충돌함에 따라(예: 무역 관련 이해상충) 가끔 합의가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한다.

경제검토보고서의 발간주기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현재 1년 주기는 EU, 일

본이며, 2년 이상은 터키,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이며, 여타 다수 국가는 1년반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년마다 경제검토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1년반을 주기로 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OECD 직원으로 구성되는 미션이 통상 2회, 각각 1주일간 회원국 정부 및 관련기관, 연구소, 학계, 노동계 등을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은 구조개선 이슈 관련 미션(structural mission)이고, 두 번째 방문은 EDRC 몇 달 전에 이루어지는 정책미션(policy mission)이다.

경제검토보고서의 특징적인 사항 중 몇 가지만 들면, 우선 경제전망부문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장 최근의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제시된 전망치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EDRC가 새로운 경제전망 발표 직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전망시점이 보고서 발표일자보다 반년 정도 앞서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거시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분석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개선과제도 다루고 있다. 2004년 한국경제보고서의 경우 토지 및 부동산시장, 조세제도, 망(network)산업, 농업정책, R&D, 중소기업정책, 고령화사회 및 연금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매번 구조개선과제 중 하나를 특별주제로 선정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심층 분석해왔다. 회원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미리 정해 놓은 몇 개의 과

제 중 하나를 회원국과의 합의하에 특별주제로 선택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세제개혁, 2001년 고령화사회, 2003년 재정지출 시스템 개혁, 2004년 경쟁정책을 특별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별주제의 작성과정은 PSB와 CSB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 먼저 프레임 워크 페이퍼 (framework paper)가 EPC(WP1)에 상정되어 주된 검토과제를 제시하게 되면, EDRC에서는 이 틀에 입각하여 분석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종합페이퍼 (synthesis paper)로 취합되어 EPC(WP1)에서 국가간 비교검토를 통해 유용한 결론을 얻는데 활용된다. 작성과정에서도 CSB 데스크는 PSB직원(WP1/EDRC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는다. 많은 경우 PSB에서 특별주제 부분을 직접 작성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국 외의 OECD 여타 부서에서 관련 분야 담당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다. OECD 경제연구(Economic Studies) 등

경제국에서 반년마다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개선 관련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견해 또는 결론이 OECD의 책임하에 있는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각 위원회에서의 유용한 이론적 분석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구조개선이슈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는 경제국 Working Papers Series 형식으로 발간되기도 한다.

3. 변화하는 경제국

조직의 활동목적이 예산제약을 전제로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것이라 볼 때 경제국도 예외라 할 수 없다. 경제국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고객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의 변화하는 요구 및 선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OECD 전체적으로 실질예산감축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국 안에서는 PSB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회원국을 전담하는 CSB의 경우 업무방식의 변화 이외에 조직 자체의 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데 비해, PSB는 구조개선과제의 비교분석기능이 강화되고 과제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 조직구성에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어 왔다.

가. 최근(2003~04년)의 주요한 변화

첫째로 구조정책분석(structural policy analysis)기능의 강화, 특히 WP1의 역할 제고가 두드러진다. 이 분야는 OECD 경제국이 여타 국제기구 등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부문이다. OECD 웹페이지 경제국 부문을 보면 그간의 연구보고서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주요한 과제들로는 경쟁정책,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경제성장과 생산성, 이민의 경제적 영향,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인적자본, 국제무역, 노동시장, 빈곤과 소득분배, 규제개혁, 보건정책 등이 있다. 최근에는 Structural Stocktaking 연례보고서, 고용정책

개선상황에 대한 평가, 상품시장에서의 규제 지수, 민간저축과 재정정책, 사적 연금 등 퇴직저축 (retirement saving)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으며, 14개 분석 프로젝트가 향후 18개월내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2003년부터 새로 도입한 국가간 구조개선과제를 매년 비교 분석하는 “Stocktaking” 프로젝트로 구조개선 상황(예: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세제가 고령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고 이를 회원국간에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제발전 지속에 가장 시급한 구조개선과제를 국가별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CSB의 경우에도 경제검토보고서 작성시 단기 거시경제 측면에 대한 분석보다는 중기적으로 경제발전 지속에 시급한 구조개선과제, 즉 주요한 도전사항(key economic challenges)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둘째로 OECD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미션단의 회원국 방문시 정책미션(policy mission)의 경우 정보 및 자료수집기능을 지양하고 장관급 고위공무원과의 정책의견 교환 및 토론을 가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회의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OECD의 정책권고내용을 사전에 회원국으로부터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다. 1년에 2회 있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도 세계경제의 변화동향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소요기간이 종전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아울러 정례발표 외에도 간이모형을 활용하여 추가로 2회 중간(intermediary)발표를 하게 되었다.

나. 향후(2005~06년) 전략 및 예상되는 변화

경제국의 향후 진로는 신규 프로젝트의 내

〈표 2〉 2005~06년 국가간 구조정책 분석 프로젝트

2005년	2006년
고령화에 대한 추가연구 (further dimensions of ageing)	직업전략에 대한 재평가 (Jobs Strategy reassessment)
직업전략에 대한 재평가 (Jobs Strategy reassessment)	이민정책에 대한 WP1/EDRC의 종합 페이퍼
경쟁정책에 대한 WP1/EDRC의 종합 페이퍼 (synthesis paper)	WP1/EDRC 신규과제 프레임워크 페이퍼 (framework paper)
경제구조개선 상황에 대한 Stocktaking (1개의 thematic paper 포함)	경제구조개선 상황에 대한 Stocktaking (1개의 thematic paper 포함)
경제구조개혁의 정치경제학, 국제협력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유인(특히 고등교육) 중 1개 과제	
1~2개 수준의 경제구조 정책이슈	1~2개 수준의 경제구조 정책이슈

용과 규모, 가용예산 등이 아직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다. 다만 국가 간 구조정책분석(cross-country structural

policy analysis) 기능과 경제검토보고서가 회원국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 개괄적인

〈표 3〉 향후 EDRC 일정 및 중점검토대상 구조개선과제

국 가	EDRC 일정		중점검토 대상
	최근개최일	향후 일정	
호주	2003년 2월 5일	2004년 11월 17일	경쟁정책
덴마크	2003년 4월 23일	2004년 11월 29일	경쟁정책
일본	2003년 10월 13일	2004년 12월 6일	지방재정 (fiscal federalism)
벨기에	2002년 11월 18일	2004년 12월 13일	이민
이탈리아	2003년 5월 26일	2004년 12월 16일	이민
아이슬란드	2003년 3월 3일	2005년 1월 10일	경쟁정책
스페인	2003년 2월 24일	2005년 1월 31일	지방재정 (fiscal federalism)
오스트리아	2003년 9월 8일	2005년 4월 19일	지방재정 (fiscal federalism)
프랑스	2003년 5월 20일	2005년 5월 9일*	경쟁정책
EU	2004년 6월 8일	2005년 5월 17일	미정
스웨덴	2004년 1월 12일	2005년 5월 19일	보건
그리스	2002년 6월 6일	2005년 5월 24일	이민
헝가리	2003년 12월 3일	2005년 6월 7일	혁신*
뉴질랜드	2003년 11월 17일	2005년 6월 9일	경쟁정책
노르웨이	2004년 1월 26일	2005년 6월 20일*	보건
멕시코	2003년 10월 20일	2005년 7월 4일	지방재정 (fiscal federalism)
슬로바키아	2003년 11월 24일	2005년 7월 또는 10월*	미정
한국	2004년 5월 3일	2005년 9월 7일*	미정
영국	2003년 12월 16일	2005년 9월 20일 또는 27일*	혁신
미국	2004년 3월 10일	2005년 9월 14일	지방재정 (fiscal federalism)
네덜란드	2004년 4월 5일	2005년 10월 17일	혁신
스위스	2003년 11월 5일	2005년 10월 5일 또는 11월 2일*	미정
아일랜드	2003년 4월 14일	2006년 1월*	경쟁정책
포르투갈	2004년 7월 5일	2006년 1월 19일 또는 2월 13일*	미정
독일	2004년 6월 21일	2006년 2월 20일*	미정
폴란드	2004년 4월 1일	2006년 3월 27일*	미정
핀란드	2004년 9월 7일	2006년 4월 17일*	미정
룩셈부르크	2003년 6월 16일	2006년 4월*	미정
캐나다	2004년 9월 13일	2006년 6월 15일*	미정
터키	2004년 9월 29일	-	미정
체코	2004년 10월 11일	-	미정
브라질	2001년 4월 27일	2004년 11월 23일	-
중국	2001년 12월 10일	2005년 6월 3일	-
칠레	-	2005년 9월 20일 또는 27일*	-
러시아	2004년 5월 25일	2006년*	-

주: * 잠정적이며, 추후 확정을 요함

변화내용을 설명하겠다.

〈표 2〉는 새로이 추진되는 주요 구조개선 프로젝트의 리스트이다. 특히 “고령화”와 “직업전략” 2개 과제가 중점추진될 예정인데, 이는 OECD 사무총장이 우선순위를 두도록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제구조개선 관련 보고서를 모아 경제구조 전망 (Structural Outlook) 책자를 새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PSB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 관련 기능을 통화금융부문과 통합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과(Monetary and Fiscal Policy Division)가 2005년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제약 하에서 구조개선과제에 대한 기능강화 요구는 경제국으로 하여금 선택과 집중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PSB와 CSB 간의 협력관계 및 경제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WP1/EDRC 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해온 경제검토보고서의 특별주제 부분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PSB와 CSB 간 협력관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Stocktaking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양 부서 간 협력의 강화, 경제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구조개선과제 작성방식 변경 등 보완방안이 논의중이다.

4. 경제국의 인사정책⁴⁾

경제국의 직원 채용은 한 분야에 최적인 인물보다는 보다 일반적으로 경제국 및 OECD 여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정책도 타 Branch, 예를 들면 PSB에서 CSB로 또는 CSB에서 PSB로 이동(transfer)을 의무화하는 등 generalist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는 요건을 구비한 직원에게는 종신직(indefinite duration) 채용을 원칙⁵⁾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국은 이에 합당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직원에 대한 평가는 한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현저하게 다른 두 개의 업무에 대해 이루어지게 된다. 신규직원은 최초의 단기 계약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간평가(media-term review) 결과를 반영하여 타 부문(Branch)으로 전직하게 된다. 전직시에는 업무의 우선순위, 개인의 능력과 선호 등을 감안하나, 극히

3) 최근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간 구조정책분석 기능에 대해 확대 18개국, 중립 10개국, 축소 1개국으로 응답했고, 경제검토보고서는 확대 11개국, 중립 16개국, 축소 0개국으로 응답했다. 특히 전자는 OECD 활동중 유일하게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확대-축소 기준).

4) 이 부분은 “Staff policy in the Economics Department (2004년 6월)” 라는 경제국의 직원용 자료에서 A-3 및 A-4 직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였다.

5) C/WP/SP/WD(98)10/REV2

예외적인 경우 (예: 현재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직 자체는 의무사항이며, 단기계약의 종신직으로의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종신직을 염두에 두고 경제국에 지원할 경우에는 구조정책분석 업무와 회원국 업무를 모두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중간평가는 매년 있는 정례평가와는 달리 직원의 장기적인 경력전망을 평가하는 데 있다. 중간평가는 경제국 국장급 5명, 경제국 관리지원부서(Management Support Unit: MSU)의 장, OECD인적자원관리부(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직원관리패널(Staff Management Panel: SMP)이 담당한다. 1차 중간평가는 계약 3년차 초에 담당 과장 및 타 Branch 소속 과장 2명으로 이루어진 패널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와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SMP로 제출하면, SMP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i) 타 Branch로의 전직 및 계약기간 2년 연장, (ii) 타 Branch로의 전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계약기간은 2년 연장, (iii) 계약기간 불연장. 아울러 계약 4년차 말에 2차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연도별 정례평가 결과, 과장급 4명으로 구성되는 Standard Recruitment Panel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SMP는 현재의 단기계약을 종신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A-3(economist) 직원에 대해서는 A-4(senior economist 또는 principal administrator) 직급

으로 승진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때 이루어진다.

5. 내가 바라본 OECD, 경제국

사무국 각 부서에 따라 OECD에서의 근무 경험에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정부 파견공무원으로 OECD에서 지낸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은 소속이 한국/일본 데스크라는 성격으로 인해 다소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2차례의 한국경제검토회의, 한국/슬로바키아 데스크에서 한국/일본 데스크로의 조직 변경,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조명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간 사무국 진출사례나 사무국 소개를 통해 직원의 자질, 파견생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이미 수차례 언급되었기에 경제국에서의 필자의 경험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사무국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험 및 인식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먼저 OECD, 특히 경제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늘 필요하다는 점이다. OECD 전체로 한국인 직원 수가 32명인데 비해 경제국에는 1명에 불과하다. 필자가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한국인이 4명(정규 A-3 직원 2명, Young Professional 1명, 정부 파견공무원 1명)이었으나, 한 분은 휴직상태이고 다른 두 분은 한국과 미국의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다. 참

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OECD 전체로는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경제국에는 일본 정부 파견공무원 한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제국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회원국의 각종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경험을 쌓는 데 있어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OECD 여러 부서 중에서도 특히 추천할 만한 부서이다. OECD의 직원 신규채용은 국가별 쿼터가 없는 공개경쟁이므로 개인의 자질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과거 근무했던 몇몇 부서의 역할 및 주변 직원들의 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면접 등의 과정에서 한국인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취급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무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연구분석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답지 않게 형식에 치우치고, 부서간 의견조정을 강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국에는 보고서 작성양식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글자형태, 크기, 배열, 부표, 그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고서 종류별로 부문당 글자 수, 각주에 대해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다. 물론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고서를 생산해내는 OECD의 성격상 표준적인 운영지침(SOP)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 및 통계수치의 일관성(consistency)이 엄격히 요구되는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는 관련된 최근의 OECD 보고서를 찾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보고서 내용이 여타 부서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부서간 의견조회 및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제국 보고서, 특

히 경제검토보고서는 거의 전 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질적인 사고와 배경을 가진 다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에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이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마감시한(deadline)이 사전에 설정되며, 의견조회를 위해 정식회의 개최 약 3개월 전에 초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OECD는 여타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현황 및 정책 홍보 이외에 건설적 비판 기능을 가진다. 예를 들면 “경제국의 국가간 구조개선과제 비교분석(Stocktaking) 프로젝트” 같은 경우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계량화하기 때문에 OECD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국가별 순위 내지 “줄세우기” 효과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특정국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경우에는 해당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경제국 내에서는 경제이론이나 서구 주요국의 제도 등과 부합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적인 시각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원국과의 견해 대립을 기피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도 종종 보게 된다.

사무국 직원은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국가의 이익 또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ECD의 2천 명 정도의 제한된 인력(이 중 A 직급은 906명에 불과)으로는 중립성 유지를 위해 출신국 보고서 관여금지원칙을 지켜나가기 어렵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분석국(CSB) 데스크의 경우인데 2~3명의 직원이 2

개 국가를 전담해야 하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 중 일부를 소속 국가 정부 또는 중앙은행 출신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는 물론 다소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여타 부서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연구분석기능을 주로 하고 있어 융통성

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하관계가 나타나 는 등 관료주의적 행태와 유사한 점도 많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단기계약의 종신직으로의 전환, Young Professional인 경우 정규직 채용기회의 확보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분상의 제약이 없는 파견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 및 성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한, 특히 담당한 과제나 프로젝트로부터의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